

2003년도 업무보고

주요 현안업무 보고

2003. 4. 2

환 경 부

보 고 순 서

I. 현안 및 쟁점과제

1.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 1
2. 경유 승용차 시판 허용여부 3
3.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5

II. 핵심 정책과제

1. 4대강 특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7
2. 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리체제 구축 9
3.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국토환경 관리 11
4.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13
5.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전략적 육성 14

I. 현안 및 쟁점과제

1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

(1) 과제 개요

- ☐ 수도권 대기질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별대책 수립 및 특별법 제정

(2) 현황 및 문제점

- ☐ 수도권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연간 10조원의 사회적 피해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('02, 환경정책평가연구원)
 - 국토면적의 12%인 수도권에 인구·자동차의 46% 집중
 - 서울의 미세먼지,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OECD 최하위 수준이고, 수도권 전역에서 악화되고 있음

※ 미세먼지 : 59('98)→76 $\mu\text{g}/\text{m}^3$ ('02), 이산화질소 : 30('98)→36ppb('02)

- ☐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대책 수립('02.12)

	2003년	2012년
목 표	- 미세먼지(76$\mu\text{g}/\text{m}^3$) - 이산화질소(36ppb)	- 도쿄 수준(40$\mu\text{g}/\text{m}^3$) - 파리 수준(22ppb)
정책수단	- 오염매체별 농도 관리 - 저공해차량 보급지원	- 지역 배출총량 관리 - 사업장 배출권거래제 - 저공해차량 구입 의무화
소요재원	'03년 예산 858억원 (4차선도로 5km 상당예산)	10년간 6조원 투자 → '12년이후 사회적피해비용 매년 7조원 저감효과

□ 특별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「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을 추진중이나, 관계부처에서 이의 제기

○ 법제정 원칙에는 합의(3.25, 경제장관간담회) 하였으나 사업장 오염총량관리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부처간 추가 논의 필요

※ 동 법은 대선공약으로서 인수위원회에서도 금년 중 법제정기로 결정

(3) 추진방안

□ 관계부처, 전문가, 시민단체 및 업계 관계자로 T/F를 구성(4월중), 연내 「특별법」을 제정

○ 사업장 오염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단계적 시행방안 마련

○ 공공기관 등의 저공해차 구매 의무화, 운행차 매연저감 장치 부착 등 자동차오염 저감방안 추진

□ 관계부처 협조를 얻어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마련

○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중 최소 50%를 대기질 개선에 집중 투자

○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연료사용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 세제에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환경세적 기능 도입 추진

2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 여부

(1) 과제 개요

- ☐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내 시판(市販)을 허용
 - 이와 병행하여 경유차량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보완 대책을 수립 추진

(2) 현황 및 문제점

- ☐ 그동안 경유차 억제정책에 따라 경유승용차의 실질적 판매금지 차원에서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설정
 - 경유차는 휘발유/LPG차량에 비하여 도시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는 10배, 질소산화물은 3배 정도 더 많이 배출
 - 미국, 유럽, 일본 등의 기술로도 국내기준 충족 불가능 (EU 기준보다 미세먼지 5배, 질소산화물 25배 높음)
- ☐ 자동차업계, 외국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, 경유승용차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조정기로 결정('02.12.26, 경제장관간담회)
- ☐ 시민단체, 전문가 등과 함께 「경유차 환경위원회」를 구성하여 협의('03.1)
 - 전체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하지 않는 전제조건 하에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에 합의('03.2)

〈합의 요지〉

- '05년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을 단계적으로 허용
 -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화('05년 50%, '06년이후 80%)
 - '06. 7월부터 휘발유:경유:LPG가격을 100:85:50으로 조정
 - '06년부터 경유의 황함량을 30ppm으로 강화(현재 430ppm)
 - 「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」 조속제정 및 소요재원 확보방안 강구

□ 환경단체는 경제장관간담회(3.25) 및 경제정책조정회의(3.27)에서의 정부결정내용에 위 합의내용이 미반영되었음을 이유로 시판허용 철회요구

-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화 비율 미제시
- 에너지상대가격을 '05년중 국제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원칙만 제시
- 「수도권특별법」은 T/F를 구성, 법안의 내용과 시행시기를 “년내”에 결정하는 것으로 모호하게 제시

※ 경유승용차 시판허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('03.6월 예정) 후에는 합의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진다는 점을 들어 정부와 환경부를 강하게 비난

(3) 추진방안

□ 정부결정 사항을 보다 구체화, 가시화하는 세부대책 조속 마련

- 매연저감장치 부착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제지원
- 에너지 상대가격 비율 조정문제를 조기에 검토 착수
- 시행규칙 개정전까지 「수도권 특별법」 정부시안 마련 등

3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

(1) 과제 개요

-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환경훼손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지역주민, 환경단체 등이 대립·갈등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

(2) 현황 및 문제점

-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, 경부고속철도에 대하여 불교계, 환경단체 등이 노선(路線) 변경을 요구
 -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: 북한산 국립공원 훼손에 반대하며 의정부시 외곽으로 노선변경 요청
 - 경부고속철도 : 천성산 정상의 고층습지(무제치늪) 훼손, 사찰 수행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노선우회 요구
- 환경영향평가 협의중인 경인운하,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, 환경단체 등이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
 - 경인운하 : 경제성 재검토 용역결과(KDI)와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에 이의 제기
 - 한탄강댐 : 홍수조절효과가 의문시되고 상류지역의 수물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

□ 현재 공사 진행중인(방조제 33km중 4.5km를 제외한 28.5km 완료)
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찬반대립 계속

○ 환경단체 등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해수를 유통하면서
새로운 개발방향을 검토할 것을 주장

○ 사업주체측은 방조제를 완공하고 미래지향적 토지이용
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

(3) 추진방안

□ 주관부처와 협력, 이해당사자 간의 합리적 해결방안을
찾도록 적극 중재

○ 새만금사업의 경우 「신구상기획단」에서 논의시 전북지역
발전에 도움을 주면서도 갯벌 생태계와 수질에 나쁜
영향을 주지 않는 대안이 강구되도록 노력

□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과 개발 간의 갈등을
사전 통합·조정하기 위한 제도 정비

○ 대통령 직속의 「지속가능발전위원회」 기능을 강화하여
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조율

○ 계획 입안단계부터 환경단체, 지역주민 등을 참여시켜
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새로운 의사결정방식 적용

※ 경의선, 동해선 연결사업에 이방식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결정하고
순조로이 공사진행중에 있음

II. 핵심정책과제

1 4대강 특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

(1) 과제 개요

- ☐ 지난 5년간 지역주민, 환경단체 및 전문가 등과 420여회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만든 4대강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목표수질('05년까지 I~II급수) 달성

(2) 현황 및 문제점

☐ 사전예방적 수질관리대책을 본격 시행중

- 하천변 양안(300~1000m)을 수변구역으로 지정, 토지를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중
-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준비중

☐ 상하류 공영(共榮)의 유역관리체제 도입

- 하류지역에서 물이용부담금(톤당 100~120원, '03년 5,313억원)을 거둬 상류지역 주민소득증대 및 수질개선사업 등을 지원
- 유역내 물문제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수계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

- ☐ 지역개발을 둘러싸고 상하류 지역간, 지역사회와 중앙정부 간에 갈등과 대립요인은 상존

(3) 추진방안

□ 좁은 국토와 한정된 수자원 여건상 상수원 보전을 위한
사전예방정책의 기초는 지속 유지

- 다만, 오염총량 범위내에서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은 허용하고,
오폐수정화기술 발전에 맞추어 규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

□ 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

- 수계별로 지역전문가가 주축이 되는 조사연구팀을 구성,
지자체별 허용오염총량을 과학적, 합리적으로 배분토록 지원
- 오염총량제 이행여부에 따라 소요재원 우선 지원 또는
개발행위 제한 등 인센티브와 역(逆)인센티브 부여

□ 수질오염의 22~37%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(非點汚染源)에
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관리대책 마련

※ 비점오염원 : 빗물에 씻겨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농경지, 산림, 도로 등

- 특히, 농림부와 협조하여 축산분뇨를 전량 퇴비화하고, 유기
농산품의 유통촉진책을 강구하는 등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

□ 4대강 대책과 연계하여 유역단위의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을
추진하기 위한 수질-수량 통합관리체계 검토

- 특히 광역상수도(건교부)와 지방상수도(환경부)의 일원적
관리체계 마련 시급

2 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리체제 구축

(1) 과제 개요

- ☐ 매립, 소각에 따른 환경피해를 줄이고 자원 절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중점 추진

(2) 현황 및 문제점

- ☐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님비(NIMBY)현상의 심화로 매립지, 소각시설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
 - 생활폐기물은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증가추세('98, 45→'01, 48천톤/일)이고, 특히 이중 약 23%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 낭비가 심각(년 15조원)
 - 사업장폐기물은 재건축·재개발 활성화에 따라 건축폐기물이 급증하여 최근 3년간 50% 증가('98, 146→'01, 212천톤/일)
- ☐ 폐가전 등 15개 품목에 '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'가 시행('03.1)되고 있으나, 일부 품목의 재활용 기반 취약
 - 포장재의 50% 이상인 플라스틱류의 재활용율이 낮고(한국 15%, 선진국 60%) 최근 급증하는 전자기기중 일부 제외

(3) 추진방안

□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환경성(폐기물 감량, 재활용성 등)을 고려하는 **에코 디자인(Design for Environment)**의 보급 촉진

○ 금년중 가전, 타이어 등 100여개 업체 대상

□ 다량발생 폐기물에 대한 감량, 자원화 추진

○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('05.1)에 대비, 감량화사업장 확대 및 연료화 등 처리방법 개발

○ 재생골재 수요창출을 위한 사용의무화 및 권역별 대단위 생산·유통기지 건설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

□ 생산자책임재활용 시스템 조기 정착·발전

○ 재활용율이 저조한 품목에 대한 **재활용 처리시설 확충**(형광등처리시설, 폐가전 리사이클링센터 등)

○ 휴대폰, 프린터 등 재활용 의무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

□ 폐기물을 이용, 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저감

○ 난분해성 플라스틱 폐기물의 **연료화사업**(12개소, 10만톤/년) 촉진(플라스틱류 재활용율 : '02, 15→'07, 40%)

○ 민자유치로 **수도권매립지의 매립가스**(150만 m³/일) **발전사업** 추진(발전용량 50MW, 18만가구 전력공급)

※ '03.3월 환경부-민간사업자 간의 실시협약 체결, '04년 착공 예정

3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국토환경 관리

(1) 과제 개요

- 국토의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「국토환경 보전 종합 계획」을 수립하고, 전략환경평가,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

(2) 현황 및 문제점

- 지난 40여년간 공급 위주의 국토개발 정책으로 경관 등 자연 생태계가 크게 훼손되어 왔으나, 법제도 및 관리체계 미흡
-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 영향평가, 사전환경성 검토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, 계획 수립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미흡

(3) 추진방안

-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추진
 - 「국토환경 보전 종합계획(10개년)」 수립·추진으로 ‘先 계획 後 개발’의 국토환경관리의 기본틀 정립
 - 국토를 ‘보전지역’과 ‘개발가능지역’으로 구분하는 「국토 환경성 평가지도」 단계적 작성(’03 수도권, ’04~’05 전국)

- **현행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보완하여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계획 초기단계부터 대안까지도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 (SEA: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) 도입**
 - 영국·네델란드 등의 사례를 연구,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 강구
- **금년중 「자연환경보전법」 개정을 추진, 종합적·체계적인 자연경관보전대책 마련**
 -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‘자연경관보전지역’으로 지정·보호
 - 각종 개발사업 시행 전에 지자체별 자연경관심의 실시
- **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하여 자연친화적인 국립공원 이용문화 정착**
- **신행정수도 계획입안 단계부터 환경부가 적극 참여, 환경친화적 생태도시(Eco-city)로 조성되도록 지원**
 - 선진국 수준의 풍부한 녹지, 자원절약형 순환체계(중수도·빗물이용시설, 태양열 이용 등), 친환경교통체계 등 지향
- **남·북 경협사업(공단 개발, 도로·철도건설, 관광지 개발 등)이 환경친화적으로 계획·시행되도록 지원**
 - 생태계가 우수한 비무장지대를 ‘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’으로 지정·보전되도록 북한과 협력방안 강구

4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

(1) 과제 개요

- ☐ 각종 환경상의 위해(危害)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 시책을 강화

(2) 현황 및 문제점

- ☐ 폐기물매립지 부지난으로 소각에 비중을 두어 왔으나 ('96, 5.5→'01, 13.6%)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발생
- ☐ 플라스틱류 등 화학제품의 사용량 증가로 환경호르몬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우려

※ 국내 37,000여종 화학물질 유통, 매년 300종 증가

(3) 추진방안

- ☐ 소각시설 실태조사와 시설운영 효율화로 국민 불안감 해소
 - 주요 소각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실시와 소형 소각시설(200kg/시간이하)의 배출기준 설정 등 다이옥신 관리 강화
- ☐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
 - 현행 유해성 심사를 OECD 수준으로 강화('03, 3개→'06, 13개 항목)하고, 다량배출·고독성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제도 도입
 - 화학테러 및 사고에 대비하여 「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 시스템」 구축 등 관리체계 강화

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전략적 육성

(1) 과제 개요

- 2010년 세계 5위권 환경산업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여 환경기술(ET) 중점 개발 및 환경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추진

※ 세계 환경시장은 연간 5~6% 성장, '10년에는 약 9천억불 전망('01, 삼성경제연구소)

(2) 현황 및 문제점

-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은 선진국의 60~70% 수준이고 특히 사전예방기술, 청정기술 분야는 50% 이하 수준
- 국내 환경산업체는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여력 부족, 좁은 국내시장에서의 과다경쟁 등으로 국제 경쟁력 취약

(3) 추진방안

- 10년간 총 1조원을 투자('01~'10), 사전예방기술, 청정기술 등을 중심으로 「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」 역점 추진
 - 공공 환경시설의 신기술 우선사용제도 도입, 중소기업의 신기술 검증비용 지원(50%) 등 환경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
- 중국, 동남아 등에 대한 환경산업 진출을 적극 지원
 - 북경올림픽('08), 서부대개발 등 중국 환경특수(特需)('01~'05, 112조원)를 겨냥하여 북경에 설치·운영중인 「한국환경기술 전시관」을 중심으로 5대 거점도시 진출 추진
 - One-stop 지원센터 설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현지 진출기반을 강화